

형사소송법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동네 선후배 사이인 甲과 乙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하고 A에게 접근하여 확실한 투자를 미끼로 A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甲은 후배 B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 乙은 사기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피해자 A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 조사에서 A는 “甲이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S는 甲을 ‘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하고, 乙에 대해서는 乙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甲은 1심 재판의 공판정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 하였으나,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검사 S가 사기죄에 대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사법경찰관 P 작성의 A에 대한 진술 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 P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검사 S는 피해자 A를 甲의 사기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A는 법정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 P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니 모두 자신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기망한 사람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50점)

- 1) 사법경찰관 P 작성의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를 甲의 사기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15점)
- 2) 만일 피해자 A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면, A에 대한 진술조서를 甲의 사기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십시오. (10점)
- 3) 甲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자신(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사기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십시오. (15점)
- 4) 1심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甲에 대한 사기와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甲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자, 甲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상해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세무서장 T는 甲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사 S는 수사한 결과 甲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T는 다시 甲의 2015년도 국세체납 사실이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사 S는 甲의 2015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 처분하였던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30점)

- 1) 검사 S가 甲의 2015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무서장 T의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가?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15점)
- 2) 만일 세무서장 T의 고발이 있기 전에 검사 S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한 경우, 그러한 수사는 적법한가? (15점)

제 3 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甲은 만 17세의 청소년 A를 고용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의 과정에서, 청소년 A가 수사기관의 사전 지시를 받고 甲을 설득하여 고용된 사정이 확인되어 甲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임이 드러났고, 이에 1심 법원은 甲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총 20점)

- 1) 1심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甲만이 무죄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0점)
- 2) 만일 1심에서 피고인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고인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경우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